

# 호남 키워드 '차별 철폐 · 분권 강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

## 호남권역 TV 토론회 인사·예산 차별 해법 제시

문재인, 인사 대당평론  
안희정, 예산 차별 대안론  
이재명 '예산 권한 지방 이양'  
최성, '개헌 담보 자치 분권'



지난 24일 오후 광주 MBC 공개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호남권 경선토론회에 앞서 (왼쪽부터)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24일 아권 텃밭 광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호남권역 TV 토론회에서 4명의 대선주자들은 호남 비전의 양대 키워드 차별 철폐와 분권 강화를 꺼내 들었다.

우선, 호남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껴온 인사, 예산 차별에 대한 큰 틀의 해법들이 제시됐다.

대세론을 앞세운 문재인 후보는 인사 차별을 '적폐 중 적폐'로 규정한 뒤 인사 대당평론을 제시했다.

그는 "호남의 인구 대비 정부직 진출 비율이 낮고,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장관 한 명 없고 차관만 4명 배출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해법으로 총리 인사 대당평, 즉 호남 총리 기용, 장·차관 인사 지역별 비율 국민 공개, 지방대 출신 채용 확대를 위한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호남 확대론의 요체가 인사 차별이었다고 판단, 이날 토론회 내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인사차별 철폐에 목소리를 높였다.

대안론을 내세운 안희정 후보는 "대당평 인사와 함께 예산 차별도 없애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 발전 구조를 깨기 위해 민주

정부 10년 동안 세종시 이전, 자치분권 추진 등을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거꾸로 갔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새만금 등은 국가가 책임지기로 해놓고 정작 예산은 안 줬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또 지역에 대한 예산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통령 주재로 시도지사들이 참석하는 '제2 국무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분권 강화에 대한 주장도 이어졌다.

돌풍론으로 주목받는 이재명 후보는 "모두들 지방자치, 지방 발전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적인인 안은 없다"며 "결국 돈이 문제다"며 '예산 권한 지방 이양'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청년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농어민에게 연 100만원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제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호남의 아들'을 슬로건으로 내건 최성

고양시장은 "호남 차별의 해결책은 개헌을 담보로 한 자치 분권"이라며 "평주는 5·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에너지산업, 전남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도시, 전북은 새만금 발전이 분권 행정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도 '연방제국가 버금가는 지방분권 공화국 건설'을, 안 후보는 제2 국무회의 예산안뿐 아니라 분권 차원에서 중요한 제도라고 제시했다.

## 도의회, 다문화가족 복지정책 연구모임 활동 본격 시작

전북도의회 연구모임 다문화가족 복지정책 연구모임은 제1차 정례회를 갖고 효율적 활동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번 정례회에서 올해 연구활동 계획에 따라 중점 연구과제와 연구모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고 관련 실과에서는 전북도 다문화가족지원 정책현황 및 다문화화정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연구책임 맡은 최영열 위원장은 "다문화화정과 외국인 증가로 사회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통합과 다양성 수용 등을 위한 의회 차원의 연구활동에 대한 기대감과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호근 연구대표는 "앞으로 연구모임은 우수사례 지역 방문, 전문가 세미나, 선진 사례 파악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다문화가족 복지정책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북 청년들 권익증진 위한 정책연구 기대

### 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 발족... 대안제시 등 활동 기대

전북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는 24일 연구회 소속 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과 함께 정례모임을 갖고 지역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을 발족했다.

연구회 대표를 맡은 정진세 의원은 "청년세대는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이자 새로운 후속세대 창출과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계층이지만, 현재 전북도 청년정책은 미약한 현실"이라며 연구회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도내 청년인구의 감소세는 심각한 수준이었고 청년 관련 전북도 예산도 극히 미미한 모습이다.

2015년 도내 전체인구는 2009년 대비 1만 5,203명이 증가해 0.8%의 인구증가율을 보

인 반면, 19세이상 39세이하 청년인구는 2009년 대비 5만2,313명이 감소했다.

또한 전북의 청년인구는 전체 인구의 25.46%를 차지해도 불구하고 지난해 청년 관련 사업은 60개에 그치며 전체예산의 0.7%에 불과해 인구대비 예산배정비율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전북도의회 차원에서 지역 청년들의 실태와 타시도의 청년정책 등을 비교 분석하고, 지역청년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정책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게 연구회 결성 취지이다.

연구회는 이날 오전모임에서 전북 청년종합실태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청년

정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향후 연구회 활동방향을 설정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진세 의원은 "전북의 청년정책이 타시도에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지역 청년들의 외부유출을 막고 지역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세 의원을 비롯해 강용구·국주영은, 송지용·이도영·이학수·정호영·조병서 의원 등이 참여하는 청년정책연구회는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개발과 정책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도의회가 자발적으로 조직했으며, 올 연말까지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와 대안제시 등의 활동이 기대된다.

## 정성주 김제시의원 국민의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임명



제7대 김제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정성주 김제시의원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민의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정성주 의원은 3선의 시의원으로, 매번 김제시 최고득표로 당선되었으며, 조선인 5대 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재선인 제6대 의회에서도 전반기 운영위원장, 후반기 부의장을 거쳐 제7대 의회에서는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제7대 김제시의회 전반기 의장시절에는 '시민의 생각이 김제시의회 생각'이라는 기치 아래 현장의정 활동에 중점을 두고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여 의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지난 14일 폐회한 제207회 임시회에서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과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성주 시의원은 임명소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적폐청산을 위한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둔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당 중앙당 정책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송성환 의원, 전북 복지사각지대 대책 마련 촉구

도의회 송성환 의원이 24일 제34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부양의무제로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는 2015년 1,303명에서 2016년 1,586명으로 21.7% 증가했다.

긴급생계비 지원도 2014년 2,700건에서 2016년 6,765건으로 250% 증가했고 의료비지원은 1,162건에서 1,815건으로 150% 급증했다.

송성환 의원은 "부양의무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도민 중 최소 10~30%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계비 등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일시적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충족한 복지체계 구성을 위해 전북도 차원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영일 의원, 형식적 장애 인식개선 교육 도움 안돼

도의회 최영일 의원은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가 형식적"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영일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라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전북도에서 실시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를 살펴보면 3번중 2번을 다른 목적의 강의 시작 전 틀어준 동영상만 전부라고 꼬집었다.

또한 장애인복지정책 홍보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TV나 라디오와 같은 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실적은 전무하고 리플렛 배포나 신문에 보도자료 배포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국립전주박물관,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